

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

발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

연구책임 천재영 패널조사팀 팀장

조사기간 2025년 8~10월 | 전국 3,485명

목차

- 01 조사 개요 및 배경**
연구 목적·조사 설계·표본 규모
- 02 참여자 기본 특성**
성별·연령·사업 유형별 분포
- 03 노인 일자리 참여 현황**
참여 경험·인식·안전·역량
- 04 건강 및 경제 상태**
건강 수준·소득·활동비 사용
- 05 노후 생활 및 사회관계**
노후 준비·시간 활용·사회적 고립
- 06 결론 및 정책 제언**
5대 정책 과제

01 조사 개요 및 배경

연구 배경 및 목적

-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인 일·사회참여 환경 급변
- 2024년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제도 기반 강화
- 제 4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
- 국가승인통계(제 464001호) 기반 신뢰도 높은 통계 구축
- 법률에 근거한 첫 공식 실태조사로 의미

조사 설계

- 조사 대상**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
- 표본 규모** 총 3,485명 (참여자 2,985 / 대기자 500)
- 조사 기간** 2025년 8~10월 (전국 단위)
- 조사 방법** 태블릿 기반 대면 면접(TAPI) + 인쇄형 설문지 병행
- 층화 기준** 지역 (17개 시도), 사업유형(7개), 성별·연령
- 데이터 연계**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연계

02 참여자 기본 특성

성별 구성

67.4%

여성

남성 32.6%

연령 분포

52.1%

75세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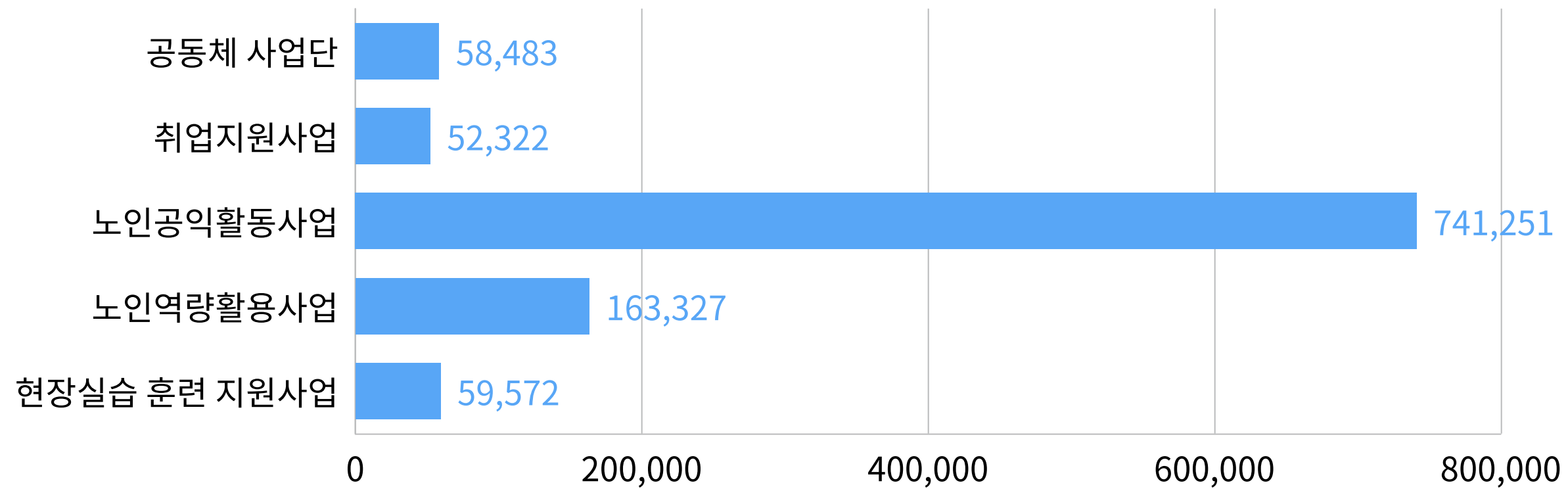
65~74세 : 41.3% | 64세 이하 : 6.6%

사업 유형

68.4%

노인공익활동사업

역량활용 15.1% | 취업지원 4.8%



03 노인 일자리 참여 현황

22.4 만원

공익활동 월평균 활동비

기초생계 보완 기능 수행

높음

안전 역량 교육 이수율

사업유형별 편차 존재

78.2%

참여 만족도

참여자 전반적 만족

공익활동 ↑

취약계층 집중 현상

저학력 · 고령 · 저소득 집중

참여 경험 및 인식 주요 결과

인적자본별 차별화

저학력 · 고연령 · 저소득 ·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공익활동사업에 집중되는 경향 확인

생애 경로 연속성

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격차가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에 그대로 반영됨

역량활용형 진입 장벽

노인역량활용사업은 경력 ·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부 집단만 참여 가능

교육 효과 편차

교육 도움 정도는 교육수준 · 연령 · 사업유형 · 수행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존재

사회관계 형성 기능

노인 일자리가 참여자 간 상호작용 촉진 장으로 기능 → 사회적 고립 완화 기여

04 건강 및 경제 상태

건강 상태

○ 만성질환 보유율

- 참여자 다수 만성질환 보유 (고령 집단 집중)

○ 의료서비스 이용

- 참여 후 의료이용 접근성 일정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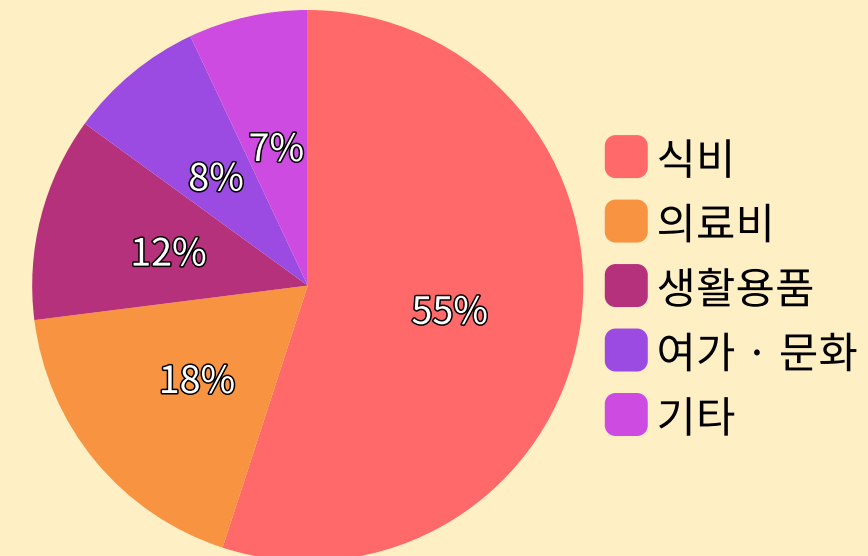
○ 건강 자기관리

- 사업 참여가 건강 관리 동기부여에 기여

○ 취약 집단 우려

- 75세 이상·저소득 참여자 건강 취약성 높음

활동비 사용처 (공익활동 월 22.4 만원)



75세 이상·저소득·1인 가구에서 활동비의 식비 사용 비중이 **70% 내외**에 달해, 활동비가 단순 부가소득이 아닌 기본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함

05 노후 생활 및 사회관계

40.2%

1인 가구 혼자 스포츠 활동

96.5%

1인 가구 혼자 디지털 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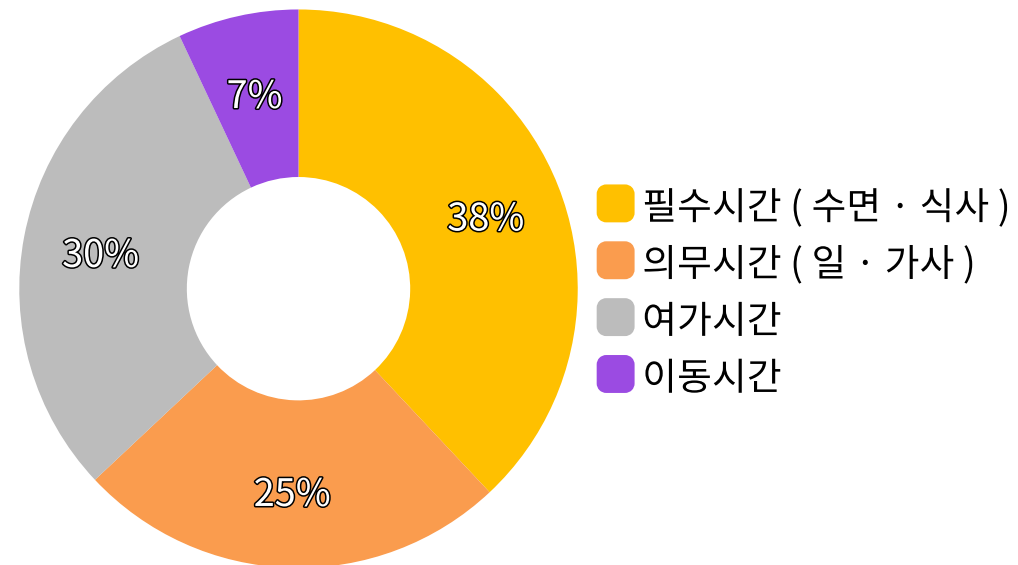
30.5%

75세 이상 혼자 여가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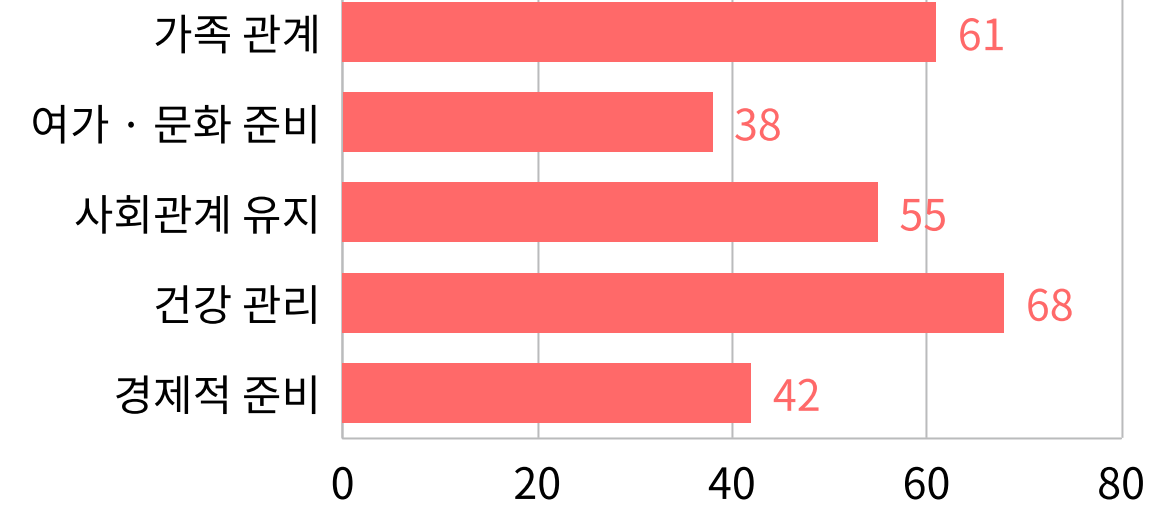
높음

저소득 고립 위험도

시간 활용 특성



노후 준비 수준



06 결론

사회안전망 기능

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약 75%가 연속참여자
취약 계층의 지속적 활동 기반이자 소득 보전 장치로 기능(주된 동기: 경제적 이유(74.2%))

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차이

공공형 일자리: 저학력, 저소득, 1인 가구 등 취약 집단 참여 비중이 높음

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

남성, 고학력 집단 : 장기근속·전일제·정년퇴직 등 안정적 경력
여성, 저학력 집단 : 단기근속·시간제·비자발적 퇴사 등 불안정한 경력이 반복됨

안전·직무 교육 역량 욕구 상이

안전수칙 준수 정도, 안전교육 제공 정도는 양호한 편
교육 수준과 사업 유형에 따라 교육 욕구가 상이(고학력, 저연령,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: 역량 강화 교육 / 취약 집단: 기초 교육)

수행기관 종사자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 문제

종사자 40~50대 여성 집중, 다수가 계약직 형태
노인 일자리 품질 좌우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세밀한 확인 필요

06 정책 제언

안전 대응 체계 강화

참여자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수행기관별 안전관리 메뉴얼 표준화
고령 참여자 대상 맞춤형 업무 배치 필요,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될 필요

건강한 일자리 환경 조성

만성질환 · 기능 저하 고령자를 고려한 직무 강도 조정 및 건강 모니터링 체계, 참여 관리 체계 구축

생애 경로 격차 완화

기초 · 직무 교육을 단계화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역량활용형 일자리 진입 지원
저학력 · 취약계층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확대

활동비 기본 생계 기능 재정비

공익활동사업 월 활동비 (22.4 만원) 현실화 검토
활동비 · 기초연금 · 공적연금 연계 노후소득 보장 체계 연계적으로 검토

전담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

수행기관 종사자 체계적 교육 · 자격 지원 및 고용 안정성 확보
기관 운영성과 · 서비스품질 인증체계 도입으로 질적 경쟁 유도

**노인 일자리는
사회적 역할 회복과
세대 간 신뢰 강화의
정책 수단입니다.**